

중동궤 경제위기 대응

李 “비상 국정체계 준비... 추경,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

공공부문 자동차 요일제 강화 지지
정유업계 등 위기극복 동참 요청
“빛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민간에도 5부제 참여를 요청했다.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에 따르면 이번주 국정 기조는 ‘중동 전쟁 위기 대응’과 ‘비상 국정 체계 준비’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대한 비상 대응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

황”이라며 “각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과 대체 공급선 등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

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량 5부제 독려를 위해 공공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은 (사용을) 살짝 제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라며 “민간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권장(사항)인데 공영주차장은 (강제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공급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에 대해선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며 발본색원·일벌백계를 주문했다. 이어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

경은 국민 체감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전,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 등을 주요 목표로 꼼꼼히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 재정의 차등 지원·지역화폐 지급 원칙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돈이 빨리 돈다”고 말했다.

이어 “단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빛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 그럴 때 쓰자고 빛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난다. (재원을) 잘 쓰는데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中소업계 “기업·소상공인 위한 현실적 지원방안 필요”

중기중앙회, 중동상황 대응 간담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 “25조 추경 편성”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중동 전쟁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안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기문 회장, 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최근 우리 경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가 중동사태로 인해 산업현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수출기업은 거래 불확실성과 물류 비용이 증가하

고 이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국내 중소기업은 원가 급등과 원부자재 조달 문제로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

다”며 “중동사태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여당에 ▲정부 수출바우처 운영 개선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확대 ▲포워드 중소기업 지원 ▲석유유통시장 거래 구조 개선 ▲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 및 피해 중소기업 지원 ▲조달청 비축물자 운영 개선 및 공공조달 납품기업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 배조용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의료기기·식품·플라스틱·알루미늄

농·물류 등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측에서는 정 대표 외에 한정에 정책위의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안도걸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간사가 자리했다.

정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며칠 전 발표했듯 경제도 지금과 같이 불가침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추경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편성할 듯 하다. 25조 원 규모로 긴급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하루가 급하고 실시간으로 급하다”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찬진 “사전에방 중심 감독체계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 시민·소비자 단체 간담회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적극지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 전환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시민·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과 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데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 방향과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



원권별 감독과 분쟁조정 기능을 연계해 윈윈 처리 체계도 구축했다.

이 원장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감독 및 분쟁조정 업무를 윈윈으로 수행하도록 개선했다”며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금융사가 올해 소비자보호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소비자 기대 수준은 높아졌지만 현장 체감

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뢰받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 중심 감독을 추진한다. 상품별 핵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과제 이행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쟁조정 기능 강화에도 속도를 낸

다. 그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금융상품의 구조와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명의무 강화와 정보 제공 방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1면 ‘K-바이오 블록버스터’서 계속

‘AI 바이오 R&D’ 수면 위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과거 제네릭의약품 중심에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등을 거쳐 이제는 혁신 신약 개발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비임과 임상실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주기 협업 체제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분야의 성장을 위해 ‘데이터 개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범부처 AI 바이오 R&D’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이청하 기자 seilee@